

형사소송법(5급)

(과목코드 : 133)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범한 경우 단독판사가 2개의 사건을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③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며,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없다.
- ④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 판결을 해야 한다.

2. 공판 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인 피의자에는 내사 대상자나 용의자도 포함된다.
- ② 증거보전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의 예로는 상고심, 파기환송 후 절차, 재심청구사건이 있다.
- ③ 증거보전을 통하여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 또는 감정은 물론 피의자 내지 피고인신문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시변호금지원칙에 따라 복수의 피고인 내지 피의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여러 피고인 내지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
- ④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유효하다.

4.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③ 기피신청은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 ④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는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당해 사건의 절차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5. 수사종결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이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 잘못을 다룰 수 없다.
- ③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로서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이 포함된다.
- ④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수사방법으로서 사진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의 민원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갑, 남성 무용수 을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다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을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다면 이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에 의해 촬영된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7.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 ㄴ.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ㄷ.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소송조건을 존부를 판단한다.
- ㄹ.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8.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는 공판정에서 다투어지는 현실적 심판대상 범위이다.
-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규범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다른 것이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에 기속된다.
- ②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10.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므로,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해야 한다.

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및 종업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재력가인 甲의 삼촌 A를 강도살인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 앞으로 갔다. 甲이 멀리 떨어져 망을 보는 사이 乙은 귀가하던 A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A의 차에서 현금을 챙기고 있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옆집 주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찰관 P1과 P2는 곧바로 출동하여 乙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몽둥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이 사이 甲은 도주하였다. 한편 P1은 압수한 몽둥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① 乙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B의 주소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 P2가 乙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경우, 이는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하며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위 몽둥이를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乙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乙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경우,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13.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기소 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안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번복 '진술서', 번복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ㄷ.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 ㄹ.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15.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 사안에서 증인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말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이는 본래증거가 아니라 전문증거이다.
- ②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알선수재죄를 공소사실로 하는 공판과정에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이다.
- ③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④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16.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상고이유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된다.
-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17.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면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경찰관 甲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乙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乙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켜 甲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게 된 경우, 甲이 乙의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乙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甲의 乙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는 위법한 강제처분이 아니다.

18.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할 수 있다.
- ③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는 때에는 이를 낭독해야 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교호신문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

19.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 상태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따라 자백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실제 자백한 경우,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형사상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인한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 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21. 디지털정보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경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피의자 乙의 휴대폰을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죄인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甲은 이를 유효하게 압수할 수 있으나 적법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③ 경찰 甲이 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乙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경우라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④ 피의자 甲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경찰 乙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乙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것만으로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직 구청 공무원 갑은 구청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청탁한다는 의사 없이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을에게서 2천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① 갑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처단형이다.
-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갑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있는 경우, 의제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④ 2천만 원을 보관금이라고 판단한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갑의 사기죄가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내란, 통화, 살인 등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며,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혐의자(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25.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
- ② 진술의 '증명력을 다룬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것은 물론,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허용된다는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탄핵증거의 예외적 허용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하여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용 신문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